

메가시티 논란보다 민생경제가 우선이다

김영록 전남지사 특별기고



‘세계 최저 출산율, 초고령화, 지방소멸...’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방을 넘어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는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오랜 세월 고착화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보이지 않는다. 현 정부도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4+3 초광역권 특화발전 전략’을 담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자체 역시 지방분권·균형발전 중심의 ‘권역별 다극 체제’ 기틀을 다지며, 지자체 간 연대·협력에 힘을 쏟고 있다.

이렇듯 정부-지자체가 혼연일체로 ‘지방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집권 여당은 최근 ‘메가 서울’ 논쟁으로 또 다른 분열과 소모적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김포시 등을 서울에 편입하려는 집권 여당의 구상은 다시금 우리나라를 ‘서울 중심의 일극 체제’로 회귀시키려는 것으로 당초 윤정부 지방시대 구상에 배치되는 시대역행적 발상이다. 뾰족 뾰족한 ‘제로섬 게임’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갈등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는 효율성 중심의 급속한 산업화와 압축적 경제 성장으로, 모든 동경과 선망의 대상이 서울에 집중되는 폐해를 낳았다. 지방의 인적·물적 자원이 서울로만 쏠리며 과도한 경쟁을 야기했고, 이는 결국 끝 모를 저출산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그런데도 또다시 지방을 뒤로한 채 메가시티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살려야 한다면서, GTX 3개 노선 외에 신규 3개 노선 투자에 힘을 쓰는 등 수도권 집중화 정책을 지역균형발전을 앞도하고 있다. 그동안 막대한 재정을 서울에 쏟아부었지만, 인구소멸 위기는 날로 악화되어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평균 0.7을 나타냈다. 특히 서울은 0.53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이에 반해 전남 합계출산율은 0.94로 전국 최하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지방은 평균을 상회한다. 결국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어느 곳에 국가적 투자와 지원을 집중해야 하는지 너무나 자명하다. 지난 2일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국내 인구

의 절반 이상(50.6%)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모여 사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난 22년간 1만800명에 이르는 출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하며, 한국의 저출생과 성장 잠재력 훼손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국민들 또한 수도권 일극 체제의 병폐를 몸소 겪어왔기에 ‘김포 등 인근 중소도시의 서울 편입’에 60% 가까운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편승한 극소수의 의견을 국민적 요구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수도권의 발전도 지속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방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초광역권 경제공동체로서, 인접 시도 간 ‘초광역 경제공동체연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인접 시도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공동의 경제·생활권을 가진 연합권역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광역 시도 단위 경제공동체연합에 연방제 수준의 행·재정적 권한을 대폭 위임해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과거 대구·경북, 부울경 등 통합을 시도했던 여러 지역들이 법적·제도적·절차적 난관과 천문학적 비용, 주민 공감대 형성 실패 등 많은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흡수 통합 방식이 아닌 광역 시도 간 경제공동체연합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

뉴욕시와 뉴저지 뉴욕, 저지시티를 포함하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과 LA시와 롱비치, 애너하임을 포함한 LA 메트로폴리탄 지역은 이러한 경제공동체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4+3 초광역권 특화발전 계획’은 이러한 지역의 현실과 요구를 잘 살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프로젝트이다. 초광역권 프로젝트를 위한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통하여, 어렵게 피어오른 지방시대의 불씨가 지방소멸을 막아내고 대한민국 전체를 살리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백년대계로서 진정한 국가발전과 국민의 여망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살피고,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새로운 ‘지방시대’와 민생 우선 여정에 집권 여당도 함께 하길 촉구한다.

여야 657조원 예산심사 돌입 특활비·R&D 예산 격돌 예고

국힘 “삭감 불가” 민주 “5조 칼질”

국회가 이번 주부터 657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지난주 부별심사와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부터 소위원회회를 가동한다.

소위는 오는 17일까지 감액 심사, 20~24일 증액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후 30일 예정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이다.

하지만 올해도 법정기한 준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벌써 나온다.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상당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승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이튿날인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실행할 경우 정국 급랭과 함께 법정 기한 준수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예산 심사 기간 더불어 민주당의 분야별 감액 요구를 방어하며 민생 예산 보완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과 감사원, 대통령실 등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 감액을 버리는 민주당과 날카롭게 각을 세울 전망이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실, 법무부, 감사원 등 기관을 지목해 업무추진비와 업무경비를 깎겠다는 것은 손발을 묶어 그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난한 바 있다.

대통령실 해의 순방비도 국익을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예산이라고 판단한다.

R&D 예산의 경우 인재 양성 관련 부분 등에 대해서는 일부 증액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기본적으로는 ‘나눠먹기’와 중복·방만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안대로 삭감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 관련 예산, 저출생·고령화 해소를 위한 양육 환경 관련 예산, 농업직불금 등의 확대에 주력하겠으나 재정건정성 확보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 5조원 규모로 ‘칼질’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검찰과 국정원, 경찰 등 14개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별도의 ‘특활비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정밀 심사를 한 뒤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는 삭감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에도 대폭 손을 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정부가 편성한 123억원을 다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70억원 정도는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지역화폐, 새만금 사업 예산은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전국세미지도자대회에서 세미노래를 제창한 뒤 객대훈 중앙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中 견제 협의체’ IPEF 정상회의 참석

16일 美 샌프란시스코 출국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12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주간에 열리는 이번 IPEF 정상회의에는 미국·일본·호주·싱가포르 등 14개국이 참여한다.

대통령실은 “IPEF 정상회의에서는 그간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 협력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했으며,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로 평가된다.

한미일을 비롯해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건강한 정치를 위한 토양 정치후원금

비옥한 토양에서 울창한 숲을 이루듯
건강한 정치후원금이
건강한 정치문화를 이룹니다.

-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 ※ 개인별 소득 및 결정세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번없이 126)
-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 가능

기탁한도 :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

후원한도 : 각 후원회별 500만원까지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